

국무조정실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7 / 전송 (02)732-9132
자치행정심의관실 과장 이재민 사무관 이희은

문서번호 국무총괄01100- 135

시행일자 2000.4.3

경유

받음 수신처참조

참조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조정관	김영하	최재우	
심의관	이명수	기획심의관	조
과장	이재민		
기안자	이희은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공동구관리에 관한 개선대책 철저히행 지시(국무총리지시 2000-(4호)

1. 전국의 공동구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공동구 합동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공동구에서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2. 기관별 중점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니 관계기관의 장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바람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관리운영개선방안을 조기수립 시달하며 추진상황을 정기점검 평가할 것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법상 의무시설장비 확보방안(소방법시행령 소급 적용 등)을 마련 시달할 것

다. 공동구관리 책임자인 시장·군수는 공동구 정밀진단을 실시, 시설개선방안 강구 및 시설개선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추진할 것

라. 설치기관의 장은 각 지역본부와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시설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

붙임 : 공동구 합동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서울·인천·부산·광주·대전시, 경기·경북·경남도, 설치기관(한국전력, 한국통신, 상수도본부, 지역난방공사)

2000
1
14

共同溝 合同點檢結果 및 改善對策

2000. 3.

國 務 調 整 室
(總括調整官室)

차 례

I. 合同點檢實施 概要

II. 點檢結果 指摘事項

1. 總括

2. 主要 細部指摘內容

III. 改善 對策

1. 法令上 義務 施設裝備 確保 및 老朽施設 補修

2. 法制度上 問題點 改善

3. 管理運營上 問題點 改善

4. 發展的인 先進制度 導入 檢討

IV. 措置 計劃

I. 合同點檢 實施概要

1. 合同點檢 對象 : 全國共同溝 18個所(서울시포함)

○ 서울시 5개공동구는 서울시가 별도 자체점검 실시(2.21~2.26)

2. 點檢 期間 : 2000. 3. 2~3.11

3. 參與 機關 : 總 9個機關・團體(국무조정실 주관)

○ 관계기관(7) : 건교부, 행자부, 자치단체, 국가정보원, 한전, 한통, 상수도본부

○ 민간단체(2) :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설기술연구원

II. 點檢結果 指摘事項

1. 總 括 : 總 249件 指摘(법령상 의무시설장비 미확보 및 의무조항 불이행)

구 분	지적건수	관 련 법 령
계	249건	
① 도시계획법상 의무시설장비 미확보 및 노후시설 미보수	215건	
• 관리사무소・중앙통제실등 의무시설장비 미확보	49건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66조)
• 조명설비등 의무부대시설 미보완	92건	• "
• 구조물 유지 및 노후시설 미보수	42건	• 도시계획법시행령(제55조)
• 통신・상수도등 수용시설 수선 및 보완 불이행	32건	• "
② 소방법상 의무시설장비 미확보 ※ 소급적용안되는 16개공동구도 설치기준 적용 파악	34건	• 소방법시행령(규칙포함)

2. 主要 細部 指摘內容

2-1. 法令上 義務 施設裝備 未確保 및 老朽施設 未補修

① 都市計画法上 義務 施設裝備 未確保 및 老朽施設 未補修

- 공동구관리사무소 미설치 및 의무시설장비 미확보
 - 공동구관리사무소 미설치 : 2개소(수원 · 구미시)
 - 중앙통제실 미설치 : 8개소
(여의도 · 개포 · 가락 · 상계 · 수원 · 여수 · 구미 · 창원)
 - 출입자 감시시설 미설치 : 13개소
(개포 · 가락 · 상계 · 부산 · 부천 · 광주 · 평촌 · 대전 · 인천 · 분당 · 군포 ·
수원 · 창원)
 - 이상침수경보 미설치 : 3개소(여수 · 구미 · 창원)
- 배수 · 조명 등 의무부대시설과 중간벽등 기타시설 미보완
 - 수도관 수전 미설치 : 14개소(목동 · 여의도 · 개포 · 가락 · 상계 · 인천 ·
부천 · 분당 · 일산 · 군포 · 수원 · 대전 · 여수 · 구미)
 - 중간벽 추가 설치 필요 : 5개소(목동 · 여의도 · 개포 · 가락 · 상계)
 - 낡은 전기시설 교체 등 기타 70여건 지적
- 공동구 구조물 및 수용시설 유지 · 보수(의무조항) 불이행
 - 「시장 · 군수」는 1년에 1회이상 공동구 유지 · 수선공사를 실시하고
 - 그 소요비용을 수용시설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설치기관」에 부담
시켜야 함에도
 - 이를 불이행, 구조물 등의 총체적인 노후화 현상 초래(42건 지적)

○ 통신·상수도 등 수용시설 수선·보완 불이행

- 전력시설 : 전력케이블 방재도료 미도포 및 도료불량부적정 12개소
(목동·여의도·개포·가락·상계·인천·부천·일산·평촌·군포·분당·대전)
- 통신시설 : CCTV장치 고장(목동·일산·군포), 광케이블과 전력선
접속불량(부산, 광주, 구미, 창원) 등 9건 지적
- 상수도시설 : 상수관로 부식 등 10건 지적
- 지역난방 : 자동차단밸브 미설치(여의도) 1건 지적

② 소방법시행령(규칙포함)上 義務 施設裝備 未確保

- 광주·부산을 제외한 소방법시행령 개정('94.7)이전에 설치된
16개 공동구에 대해 법령상 의무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 소화기 일부 미확보 : 11개소
(목동·여의도·개포·가락·인천·부천·분당·일산·군포·대전·구미)
- 화재경보용 열감지선형 감지기 등 자동화탐지설비 미설치 : 7개소
(인천·부천·분당·군포·수원·대전·창원)
* 일부구간 미설치 : 2개소(일산·평촌)
- 연소방지설비(살수장치) 미설치 : 11개소
(인천·부천·분당·평촌·일산·군포·수원·대전·여수·창원·구미)

2-2. 法制度上·管理運營上 問題點 指摘

① 法制度上 問題點 指摘

- 18개소중 16개공동구(광주·부산제외)가 소방법시행령 개정('94.7)
이전에 설치되고 의무설치기준의 소급적용이 안되어
-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 미확보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의 난연재료 미도포

- 공동구내 통신설비가 법령상 의무부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 6개공동구(부천·분당·평촌·일산·군포·대전)의 경우, 공동구내 통신설비가 미설치되어
 - 공동구 내부에서 점검활동중 긴급사고 발생시, 전화 또는 인터폰 등을 통한 외부로의 즉시 연락이 불가능
 - 도시계획법시행령(제55조)상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함에도
 - 「자치단체」는 기존 외부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방호업무만 수행하고
 - 한전 등 「설치기관」이 점검·보수 개별시행, 통합관리 불가능
 - 도시계획법상 공동구관리책임처별규정이 없고, 첨단소방시설이 필요함에도 소방법상 소방관련시설 의무설치기준이 이에 못미치어
 - 사고발생시 책임추궁 불가능, 화재감지·화재발생시 초동진압 애로
- ※ 여의도 공동구화재사건 수사는 처벌(직무유기)없이 내사종결됨

2 管理運營上 問題點 指摘

- 「자치단체」내 공동구 관리 전담기구 미설치
 - 건설과 또는 도로과 직원 1명이 타업무와 겸임 담당, 관심 소홀
- 공동구 관리사무소 직원 부족 및 전문인력 미확보
 - 전기·통신·토목 등 전문기술자가 미배치되고 기능직·일용직 등이 근무,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 곤란
 - 1개 관리소당 평균 7.2명 배치(3교대 근무할 때 실제로는 평균 2.4명 근무)

- 관리사무소 · 설치기관 · 소방관서 화재발생 동시 인지체계 미구축
 - 소방출동지연 등, 긴급시 공동대처 불가
- 5개 공동구 설계도면이 분실(여의도, 분당, 구미, 창원, 군포)되고 수용케이블 등이 과다 배치
 - 정확한 구조 및 위치 파악이 불가능, 효율적인 관리 곤란
- 행정, 방송, 금융분야 등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통신회선 상당부분이 일원화 공급(단독회선) 형태로 설치
 -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체공급이 전무, 사회혼란 초래 가능

③ 保安上 問題點 指摘

- 맨홀, 환기구 등 외부통로에 대한 출입감시장치가 없고 시건장치만 되어 있어
 - 외부인의 침입 또는 인화물질 및 화기 등의 투입 가능, 보안대책 허술

Ⅲ. 改善 對策

- ① 법령상 의무시설장비 미확보사항은 기관별 비용부담규모를 확정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모색, 의무시설장비를 조속히 확보
- ② 법제도상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
- ③ 관리운영상 문제점은 행정지시 등을 통해 자치단체 및 설치기관이 곧바로 시정토록 조치

1. 法令上 義務 施設裝備 確保 및 老朽施設 補修

① 總 所要 豫算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비 고
총 계		49,472	249건
① 도시계획법상 의무시설장비 확보 및 노후시설 보수		45,370	215건
	• 관리사무소 설치 및 의무설치장비 확보시	7,730	49건
	• 조명설비등 의무부대시설 보완시	22,032	92건
	• 구조물 유지 및 노후시설 보수시(의무조항이행)	14,821	42건
	• 통신·상수도등 수용시설 수선 및 보완시	787	32건
② 소방법상 의무시설장비 확보시		4,102	34건

※ '99年度 共同溝 管理費 機關別 費用負擔內譯

(단위 : 백만원)

총 집행규모 (18개소)	기관별 부담내역				비 고
	한 전 (15개소)	한 통 (18개소)	상수도 (18개소)	지역난방 (2개소)	
6,231 (100%)	1,786 (28.7%)	1,739 (27.9%)	2,208 (35.4%)	498 (8.0%)	

※ 상수도 관리비는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공동구관리비는 수용시설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배분

② 財源確保方案

- ① 해당 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및 설치기관 지역본부가 공동참여하는 「지역별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 각 기관별 비용부담규모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 실행하고
- ② 건교부는, 행자부(소방관서) 및 설치기관 중앙본부가 공동참여하는 「중앙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 공동구관리 기본방향, 지역별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쟁점사항 등을 최종 협의 이행

2. 法制度上 問題點 改善

① 行自부가 소방법을 改正(소급적용)하여

- '94.7이전에 설치한 16개 공동구도 '94.7 개정된 소방법시행령 기준의 의무소방관련장비 및 설비를 확보

② 建交부가 都市計画法 등 關係法令을 改正하여

- 공동구내 통신설비를 의무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상향(차등) 조정
-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공동구통합(일원화)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소방법상 처벌규정과는 별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시에 기관별 공동구 책임한계, 공동구관리책임 처벌(직무유기등)규정 등을 명시

3. 管理運營上 問題點 改善

① 「綜合的인 管理運營 改善方案」마련(건교부, 행자부 협조)

- 공동구관리사무소를 독립부서로 분리, 공동구 전담총괄부서로 개편하여 24시간근무체제를 유지, 공동구를 통합(일원화) 관리
 - 전기·통신·토목등 전문기술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관리사무소(중앙통제시스템)와 설치기관·소방관서에 同報 연결 조치
 - 공동구시설물 위치 및 설계도면을 작성 보유하고 사본과 출입구 등 열쇠를 소방관서에 비치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공동구 구조물 정기안전진단 실시 등
- ② 重要通信回線(행정·방송·금융·정보등)에 대해서는 二元化 또는 多元化 등 迂回回線을 確保(한통)
- ③ 「國家保安目標施設」로 指定 施行(국가정보원)
- ④ 「共同溝 施設改善豫算」優先 確保(자치단체, 설치기관)

4. 發展的인 先進制度 導入 檢討

- ① 도시계획법·소방법 의무시설기준을 상향(차등)조정 또는 공동구관리 기관별 의무조항, 책임한계 및 처벌규정을 명기(건교부, 행자부)
 - 각 기관별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 철저한 공동구관리 유도
- ② 공동구내 전기시설 외부검사제 도입(산자부)
 - 공동구 화재가 대부분 전선에서 발생함을 감안, 외부검사 실시
- ③ 공동구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체계 제도화 검토(건교부)
 - 수용기관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 사고에 상응한 손해를 보전
- ④ 각종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공동구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건교부)
 - 각 개별법의 분산규정을 「공동구관련 특별법」으로 통합

- ▶
- 서울시가 서울시립대(방재연구소)에 공동구관련 연구용역을 4월중 의뢰할 계획이므로
 - 관계부처·서울시·서울시립대(방재연구소) 합동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과제 등이 심층있게 검토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IV. 措置 計劃

① 合同點檢結果 指摘事項 및 改善對策 示達 : 3月末(국무조정실)

○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자치단체, 설치기관

② 改善對策에 대한 細部施行計劃 樹立・推進 : 4月中순부터(소관부처)

관계부처 및 기관별 조치사항 (참고자료)

1. 법령상 의무시설장비 확보 및 노후시설 보수

조치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① 도시계획법상 의무시설장비 확보 및 노후시설 보수 방안 시달	4월중	• 건교부
② 소방법상 의무시설장비 확보 방안 시달 (소급적용포함)	4월중	• 행자부
③ 중앙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5월중	• 건교부(설치기관 국무조정실,행자부)
④ 지역별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5월말	• 자치단체 (설치기관,소방관서)
⑤ 해당지역별 합동점검결과 지적된 법령상 의무시설장비확보 및 노후시설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액 확보계획 수립	"	• 자치단체 (설치기관)
⑥ 소요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	2015월말까지	• 자치단체,설치기관

2. 법제도상 문제점 개선

조치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① 도시계획법시행령(규칙) 개정 - 도시계획법 개정	6월말 하반기	• 건교부 • "
② 소방법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개정	"	• 행자부

3. 관리운영상 문제점 개선

조치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① 「종합적인 관리운영개선방안」수립 시달	4월중	• 건교부(행자부)
② 공동구 통합관리(일원화) 추진	6월중	• 자치단체 (행자부,설치기관)
③ 관리사무소·설치기관·소방관서간 화재발생 동시인지장치 설치	6월중	• 자치단체 (설치기관,소방관서)
④ 공동구 시설물 위치 및 설계도면 작성 보유 등	6월중	• 자치단체 (설치기관,소방관서)

4. 발전적인 선진제도 도입 검토

조치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① 서울시립대 방재연구소 연구용역의뢰	4월중	• 서울시
②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발전적인 선진제도 도입 검토	하반기	• 소관부처 (자치단체,설치기관)